

『철도청의 민영화와 철도산업의 육성』

 ■ 서울대학교수 · 한국철도학회 부회장 / 김 동 건

한 나라의 경제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 경제가 주도할 때 발전되어 가지만 자유경쟁체제는 때로 독점기업을 탄생시키고 이들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한편,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대자본이 소요되고 조직·규모가 방대하기에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가 물론 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 형태의 조직은 성격상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권위 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짐에 따라 자칫 창의력은 둔화되고 신속적인 경영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이른바 정부의 실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상호 보완하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조직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오늘날 철도를 운영하는 조직의 과제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정부는 철도청의 민영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 동안 철도청은 철도사업을 주관하는 현업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행정부처와 같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해서 철도사업을 민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철도청의 개편방안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기능은 고속철도공단으로 일원화시켜 정부기관이 계속 담당하고, 다만 여객운송, 화물수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이관 및 민영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철도청 내부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체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인력감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철도사업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은 철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철도사업을 건설(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철도청을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 없이 많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고 정부도 곧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으로 본다. 아무튼 운영부문의 민영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민영화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도사업이 민영화를 통하여 충분한 기대 효과

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철도사업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철도사업은 오랜 기간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따라서 장기부채가 누적되어 있다. (1996년말 현재 총부채규모는 1조 7,182억원), 민영화에 앞서 부채문제도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는 비용부담 원칙, 공공서비스부담에 대한 보상, 철도운임구조의 개편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사업의 민영화로 철도청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고 특수민간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분야가 기술진보이다.

우리의 철도산업이 기술면에서 매우 낙후됐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철

도의 미래상이 철도를 첨단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기술진보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진제국들은 이미 철도산업을 항공산업과 같은 수준의 첨단기술 분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나름대로 기술 진보에 노력이 있었다. 다만, 아직도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고속전철도 운행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쯤 가서 과연 우리가 고속전철을 운행하고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체기술이라도 축척할 수 있을는지 궁금스럽다. 우리도 어서 철도의 기술 진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철도기술의 진보에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